



#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

특보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100-210) 서울 중구 수하동 67  
/전화398-3620~2/ 팩스398-3630/  
발행인 공병설·공보위간사 고흥규

www.newsunion.co.kr

## ‘국정원발 짜라시’가 보도자료? 아직도 떠도는 내외통신 망령

과거 중앙정보부는 1970년대 내외 통신을 만들어 1998년까지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과 관련된 기사를 통제하면서 우리사회에 적잖은 영향을 끼쳐왔다.

북한 소식을 정부의 입맛대로 만들고 필요할 때마다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었다. 각종 자료를 만들어 북한을 폄훼하고 색깔론의 도구로도 썼다. 나라의 안위를 지켜야 할 정보기관이 정치적으로 생산물을 악용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런 식의 행태가 연합뉴스에서 다시 활개치고 있다. 특히 선거 때마다 더욱 그렇다.

4.27 재보선을 앞둔 작년 4월24일 북한부에서는 <北 재보선 앞두고 ‘南

南갈등’ 조장 선전전>이라는 제목의 해설기사가 송고됐다.

북한이 여당인 한나라당의 각종 정책을 비난하는 것을 소재삼아 작성된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필요에 따라 개별사안을 다룬 기사가 여러차례 송고됐다는 점에서 새로울 게 전혀 없었다.

하지만 해당 해설기사는 정치부를 거쳐 북한부로 전달된 A4 용지 몇 장에 적힌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북한=야당편’이라는 등식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분명했지만 기자들의 반발에도 기사는 출고됐다.

재보선이 끝난 직후에도 국정원의 자료공세는 이어졌다.

북한부는 5월12일 <北, 재보선결과 내세워 대북정책 전환 압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여당의 ‘선거 패배’를 내세워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정부를 향한 다수 유권자들의 대북정책 전환 요구를 북한의 요구로 등치시켜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 한다는 오해를 살 만했다.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에도 정보기관은 연합뉴스 기사를 통해 여론을 움직이려 했다.

선거를 사흘 앞둔 10월23일 북한부에서 송고된 <北,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與 비난 수위 높여>라는 제목의 기사도 정치부에서 제공된 정보기관의 자료에 근거했다. 북한부에서 출고됐지만 정치부의 수정을 거쳤다.

‘북한=박원순편’이라는 틀 짓기 시도로 비쳐졌다. 당시 ‘친절한’ 국정원은 자료뿐 아니라 북한 방송 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까지 제공했다.

과거 정보기관은 심리전단이라는 기구를 만들어 내외통신을 관리했다. 누구를 향한 심리전이었을까. 아마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을게다. 이제는 연합뉴스가 그 창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국민 여론이 악화되는 최근 정보기관의 심리전 공세는 더욱 강화될 조짐이다. 각종 자료를 뿌려댄다. 우리가 눈을 더 똑바로 떠야 하는 이유다.

## 개국 녀달 뉴스Y도 ‘검열의 검은 손’

신생아에 불과한 연합뉴스의 보도채널 뉴스Y에도 검열의 바람이 불고 있다.

시청률이 0.3%대에 불과하지만 이왕에 시작한 연합뉴스의 보도채널이라면 우리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박정찬 체제’의 부당한 압력과 검열의 바람은 뉴스Y도 피할 수 없었다.

김창룡 인제대학교 언론정치학부 교수의 출연 방해가 대표적인 사례다.

보도채널 프로그램을 만드는 피디팀이 12월 셋째 주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출연자로 김 교수를 선정했다.

김 교수는 이미 뉴스Y의 시청자 평가원으로 이름을 올려 제작팀이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출연자로 그를 섭외한 것은 자연스런 과정이었다. 특히 김 교수는 뉴스통신법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연합뉴스의 공정성 강화를 요구하면서도 “10년도 안된 법을 폐기 하자는 주장은 성급하고 좀 더 생산적인 논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던 인사다.

김 교수는 월요일께 섭외받은 후 방송을 꼼꼼히 챙겨보고는 관련된 자료를 수요일께 제작팀에 전달하면서 사실상의 제작과정에 들어갔다.

그런데 토요일 오전 녹화에 앞서 제작PD는 국장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는다. “윗선에서 김 교수의 출연을 보류하란다. 편성상 문제가 생겼다고 둘러대고 출연을 보류시켜라.”

왜 그랬을까. 그 누구도 ‘윗선’의 의중을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다만 김 교수가 ‘표표히 뉴스Y를 떠난’ 김석진 당시 보도본부장의 출마에 비판적인 글을 쓴 패짚이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교수는 출연 보류 이후 시청자 평가원을 그만 뒀다. 그는 “연합뉴스와는 인연이 아닌 것 같다”는 말을 덧붙였다.

연합뉴스의 우군이 되어줄 전문가를 적으로 돌린 셈이다.

‘윗선’의 압력은 이뿐만이 아니다. 뉴스Y에는 매주 1회씩 내보내는 ‘Y초대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 전세계의 눈은 한반도로 향했고 ‘Y초대석’ 제작진은 북한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해줄 권위있는 전문가를 물색하던 중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원광대 총장을 출연자로 섭외했다.

정 총장이 서울로 올라오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작



진은 원광대가 있는 익산까지 직접 내려가 인터뷰를 녹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 제작 역시 중간에 멈춰섰다.

이번에도 특별한 이유를 대지 않은 채 “윗선의 지시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내려왔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내 정치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당시 제작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과연 윗선은 누구일까. 구체적으로 규명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윗선이 누구이든 박 사장에 의해 임명된 사람들이라는 점만큼은 분명하고 결국 모든 책임은 인사권자의 몫이다.

# “연합뉴스는 해명전문인가”

## 각종 인사청문회에서 부실·편파 기사

장관은 업무능력과 자질 못지 않게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받는 자리다. 국회 인사청문회 때마다 후보자의 도덕성이 주된 검증대상에 오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야당의 의혹 제기가 여권에 흠집을 내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부인할 순 없다. 그러나 도덕성은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을 갖췄는지를 평가할 유효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언론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동안 연합뉴스의 인사청문회 보도는 밋밋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후보자의 의혹을 먼저 찾아내 국민에게 전달하려는 적극적 태도와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었다.

더욱이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이를 적극 소개하고 검증하려는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정치공세 내지 정치공방적 성격으로 다뤄온 경우가 많았다.

이런 맥락에서 총리와 장관 등 8명이 청문회 대상에 올랐던 2010년 8·8 개각의 보도 양태를 되짚어 보자.

대상자 8명 가운데 김태호 국무총리,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도덕성 시비로 낙마했다.

### 의혹 해명에만 ‘급급’

당시 연합뉴스는 제기된 의혹을 처리하는데 소극적인 듯한 인상을 갖게 했다. 한 언론은 8월13일 김태호 후보자의 재산이 3년7개월 새 10배로 증가한 점을 문제삼았지만 연합뉴스는 나흘 후에야 이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김 후보자의 신용카드 공제액이 ‘0원’이라는 데 대한 문제 제기도 하루 늦게 해명과 함께 처리됐다.

연합뉴스가 내보낸 기사의 제목을 보면 의혹 제기인지, 정치공세인지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일례로 당시 신문에서 뽑은 제목을 살펴보면 “고교동창집 전세 4년째 계약갱신안해” “부동산 가치 축소신고” “지사 때 도 예산으로 부인차 구입” “부인수뢰보도 무마의혹” “논문 4번이나 중복게재” 등으로 매우 구체적이다.

그러나 연합뉴스가 내보낸 제목은 <여야, 인사청문 공수대결 치열> <인사청문 대상자들 의혹·해명> <野, 인사청문회 앞두고 ‘의혹제기’ 양산> <민주, ‘김태호 인사청문’ 준비 가속도> <野, 김태호 청문회 D-1 총공세> 등이었다.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한다는 인상보다는 정치공방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현장 기자들이 취재원을 접촉해 어렵사리 캐낸 새로운 팩트들도 이런 류의 기사에 묻혀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물론 야당의 주장을 검증하지도 않은 채 곧이곧대로 믿고 제목으로 다는 것에 대한 부담을 부인할 순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정공법을 택해야 할 때도 있지만 연합뉴스는 그렇지 않았다.

이런 양상은 다른 후보자에 대해서도 비슷했다.

신재민 문화부 장관 후보자는 양도세 1억원 회피와 부인의 땅투기 의혹이 생기고 위장전입 논란까지 불거졌지만 연합뉴스는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그에 대한 첫 보도는 <신재민 “주거·임대 위해 부동산 정상거래”>라는 제목으로 나갔다. 의혹을 소개하기보다는 해명에 방점을 뒀다. 의혹에 대한 스트레이트 기사가 먼저 나가고 해명이 붙은 일반적 기사 작성방식과도 괴리가 있었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도 쪽방촌 투기 의혹과 무리한 전세금 인상 문제가 논란이 됐지만 연합뉴스는 이를 <野, 청문회 앞두고 ‘의혹제기’ 집중> 등으로 다루는 데 그쳤다.

### “나는 해명전문 기자인가” 자괴감

당시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관련 발언 역시 초기 기사 대응이 다소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조 내정자가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라고 언급한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예민한 사항이었지만 연합뉴스는 다른 제목의 기사에 한 문장 소개하는



수준에 그쳤다. 다음날 다른 언론은 대부분 차명계좌 발언을 제목으로 달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시 취재에 참여했던 한 기자는 “내가 후보자를 대변만 해주는 해명 전문기자인 것 같다”는 자조섞인 말까지 내놓기도 했다.

연합뉴스가 청문대상 후보자의 도덕성을 얼마나 주도적으로 검증해야 할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기된 의혹이 계속 굴러가거나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 ‘박 사장과 10년 친구’에 너무 달라진 법원 기사 공판기사 이례적 형식.. 무죄변론 강조

법조 기사의 결심공판에서 나오는 피고인 최후 진술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판사의 선고는 눈 앞에 두고 피고인이 검찰과 공방을 끝낸 상태에서 감회 정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특정 인사의 결심공판 기사는 여러모로 파격적이었다.

박정찬 사장이 부임하기 전후 재판받은 여당의원 P씨의 결심공판 기사를 비교해보자.

다음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P씨의 2008년 11월 결심공판이다.(기사의 형식을 보자는 것이므로 원문을 그대로 실진 않았다)

〈제목〉 P씨에게 벌금형 구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P씨와 공범 K씨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P씨와 K씨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P씨는…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라고 말했다.(혐의를 다시 구체적으로 언급)  
P씨는 최후진술에서 “통상적인 인사였다. 어쨌든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K씨는…라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일에 열린다.

이 기사는 결심공판 기사의 전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훗날 다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P씨의 2009년 11월 1심 결심공판 기사를 보자. 박정찬 사장 재임시다.

〈제목〉 P씨 “검찰의 주장 상식에 안 맞아”

검찰이 기업인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P씨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P씨에게 벌금형을 구형하면서 …라고 주장했다.(공소사실이 인정된다는 개략적인 언급)  
P씨는 최후진술에서 “돈을 받은 건 사실이 아니다. 처음본 사람에게 돈 받는 것은 상식에 안맞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P씨는 “후원금도 모르는 일이다. 정상적 회계처리했다”고 말했다.  
P씨는 “무고한 사람을 매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P씨는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일에 열린다.

우선 제목부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P씨의 주장이 먼저 나와 있다.

검찰의 주장도 P씨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는 사실을 제공하는 단락에 덧붙여져 있고 ‘정치자금 제공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보강자료를 통해 소명된다’는 추상적인 내용밖에 없다.

그러나 이어지는 P씨의 최후진술은 세 문장이나 나열돼 있다. 여기에는 재판 핵심 쟁점에 대한 P씨의 반박이 충실히 담겼고 공정한 재판을 호소했다는 내용도 덧붙여졌다.

제목부터 제목부터 본문까지 기사의 상당 부분이 무죄를 주장하는 그의 변론에 할애된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법조 기사는 데스크로부터 ‘박 사장과 P씨가 10년 지기 친구란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박 사장이 친분이 있는 P씨의 기사를 우호적으로 써달라고 직접 지시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박 사장은 이와 같은 편파 보도와 친구 운운하는 말이 일선 기자에게까지 내려오게 된 데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1심 결심공판 기사 외에도 P씨의 결백을 강조하는 내용의 기사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

- ▲P씨 ‘불법자금 받은 적 결코 없다’(1심 첫 공판)
- ▲P씨 ‘처음 본 기업인 돈 받는 건 상식에 안 맞아’(1심 결심)
- ▲P씨 항소심서도 ‘불법자금 결코 안 받았다’(항소심 첫 공판)
- ▲P씨 상소심 결심서도 결백 주장(항소심 결심)

‘파사현정’ 표현까지 써가며 검찰의 주장을 과도하게 전달하여 무리를 일으킨 한명숙 전 총리 공판기사와 비교하면 그 편파성의 배경에 관심이 더욱 쏠린다. (3월7일 특보 참조)



# ‘정책’ 선거보도 형평 잃었다

## 선거앞 야당 핵심공약 비판성 기획기사

지난 2010년 5월 25일 연합뉴스는 <긴급진단:포폴리즘> 시리즈 4건을 출고한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도울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실현의 근거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이 특집은 무상급식을 다룬 첫번째 기사에서부터 균형을 잃는 바람에 그 기획 의도가 크게 퇴색했다.

제목부터 그랬다. 『전면 무상급식 허실』이 바로 그것이다.

당시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 공약인 ‘무상급식’만 제목으로 뽑고 본문 36줄 중 무상급식 공약의 문제점은 24줄을 다룬 반면 여당인 한나라당의 대응 공약인 차등제 무상보육의 허를 꼬집는 내용은 5줄에 그쳤다. 형식적 분량의 형평뿐 아니라 내용적 균형마저 무너져버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포폴리즘이라는 용어 선택도 부적절했다고 연합뉴스 노조는 그해 7월28일 발행분 ‘연합노보’에서 지적했다.

### 데스킹 과정서 형평성 상실

기사는 어떤 면에서는 제목 장사라고 할 수 있는데, 포폴리즘이라는 용어가 당시 야당의 정책을 공격하는데 주로 사용됐던 정황 때문이다. 기사계획 입안 당시 제목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대비하는 모양새로 형평을 유지하려 했으나 데스킹 과정에서 바뀌었다.

해당 기사를 살펴보자.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당과 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들이 초·중학교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재원마련 계획을 결여한 이른바 ‘포폴리즘적 공약(空約)’을 무차별로 쏟아내고 있다.

초·중교 교육이 헌법상 규정된 의무교육인 만큼 그 연장선에서 급식 등이 국가의 의무이자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지만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제대로 검증이 안돼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공약들은 대개 선거직후 폐기되기 일쑤지만 선거공약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집행될 경우에는 그 부작용이 더욱 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과 진보신당 등 야권은 이번 선거에서 초·중학교 친환경 전면 무상급식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실시돼온 무상급식을 당장 내년부터 전면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실질 의무교육을 실현하고 아이들이 ‘눈칫밥’ 먹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명분에서다.

현재 100만명 정도가 혜택을 보는 저소득층 무상급식에는 매년 3천400억원 정도가 들지만 전면 확대시 연간 1조7천억~2조원이 소요된다. 야권은 중앙정부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이 나눠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중단하고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이 정도 예산은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적지않은 전문가들은 전면 무상급식의 실현을 위한 재원마련이 결코 쉽지 않으며 자칫 불요불급한 다른 교육예산을 잡아먹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당초 무상급식과 관련한 논란은 진보성향의 김상곤 경기 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3대 공약의 하나로 제시, 당선되면서 시작됐다.

올 2학기까지 도내 초·중·고생 전원에게 무료급식을 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예산문제로 올해 초등 5~6년생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2014년까지 의무교육 대상 초·중·고생 138만명에게 급식하기로 바꿨으나 도의회가 몇 차례 퇴짜를 놓으며 논란을 빚어 왔다.

이어 선거철이 되면서 야당과 야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서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 정책을 앞다퉈 채택한 것이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도 초·중·고생을 상대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북구 4개국 정도 뿐으로, 그만큼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

경기 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5~6학년 급식예산 816억원의 책정을 위해 장애아 교육, 전문계고 지원 등 수백억원의 교육예산을 폐지하려 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또 정부가 4대강 관련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감세정책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당장 이들 예산이 무상급식 재원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한 토론회에서 무상급식을 ‘포폴리즘’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하면서 “사회주의 국가로 가자는 것도 아니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나는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은 전면 무상급식을 ‘좌파 포폴리즘’으로 비판하면서 대응카드로 차등제 ‘무상 보육’을 내놓았다.

이 공약은 고소득층 30%를 제외한 서민·중산층의 아동에 한해 보육료와 유치원비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것이어서 포폴리즘 논란에서는 다소 벗어나 있지만 내년 4천400억원, 그 이듬해 5천680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재원 대책으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경제위기 여파와 감세정책 등으로 당국의 재정이 충분치 않은 형편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다소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처장은 “여야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따지지 않은채 선거에 임박해 표를 얻고자 경쟁적으로 공약을 던지고 있다”며 “이런 공약들은 선거가 끝나면 슬그머니 사라지는 게 대부분이며 결국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갈등 요소로 남게 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 외에 솔깃한 교육공약 봇물, 선심성 복지정책 남발, 장밋빛 개발공약 등 나머지 3건도 애초 특집 의도에 간히면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복지 이슈에 대한 냉소와 야유에 치우쳤다. 따라서 국회에서 몸싸움 한 번 한 것을 두고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주는 게 아깝다고 비난하고 국감이 부실했다 하여 국감 무용론을 되살리는 식의 정치 혐오 부추기기 프레임이 벗어나지 못했다.

